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2022년 11월 8일에 대북정책, 북한경제, 군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사회

조동호 교수(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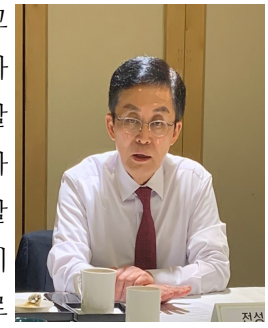
토론

이상현(세종연구소), 전성훈(경민대학교), 천명국(한국국방연구원)





조동호: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에 북한은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투기 150대를 출격시켜 동·서해 완충 지대에 수백 발의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일 북한이 울릉도 부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지면서 울릉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나가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실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향후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북한경제,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성훈 박사님께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전례 없는 북한의 도발이 제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전성훈: 올 초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 여부와 시기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그중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VOA(Voice of America)에서 북한이 갱도 입구를 차단하고 봉쇄하기 시작하는 것을 핵실험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핵실험 시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천명국 박사께서 기술적인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정교하게 소형화·경량화하고 보다 발전된 전술핵탄두를 만드는 차원에서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 같다. 지난 2주간 북한이 보여 온 도발의 규모와 강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설사 핵실험을 실시하더라도 정치·사회·외교적으로 큰 충격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북한은 우리나라가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면 보통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맞대응을 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비록 재래식 전력이지만 북한은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은 2017년 12월에 화성 17호 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업관계자대회와 2018년 1월 1일의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음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북한이 핵과 관련된 대화의 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만, 이러한 대화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는 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 국무부 군축 검증 담당 차관보가 카네기 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군축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물론 미국 국무부에서 이를 시인하지는 않았으나 어쩌면 이것이 미국의 속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완전한 비핵화로 돌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미국 역시 군축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미전략에 미세한 조정은 있겠으나,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핵보유 일부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조동호: 말씀 감사하다. 전성훈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다음으로 이러한 북한의 의도, 핵실험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상현 박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상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위성 이미지를 비롯해 풍계리 테스트장 갱도를 정비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전성훈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북한이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완전한 핵 억지력을 가졌다고 자신하기는 스스로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미사일에서는 재진입체 기술, 핵탄두에서는 성능 개량이라든지 전술핵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소규모의 전술핵실험을 여러 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전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는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최대의 임팩트를 초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셈하고 있을 것 같다. 아직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핵실험 타이밍은 중국과 미국 변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은 제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마무리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변수의 상당 부분은 해결된 것 같다. 이제 북한에 남은 것은 미국 변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민주당, 공화당을 두고 북한은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어떻게든 가장 큰 임팩트를 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하는 타이밍을 잡고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다.



천명국: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한다. 핵실험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요소로 중국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북한이 올해 봄부터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실험이 미뤄진 데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다. 또 다른 근거로 최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여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이처럼 중국은 어느 정도 북한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중국이 북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용인할 테니 핵실험은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닐까 싶다. 과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찬성해서 채택되면 중국의 압박이 있어도 핵실험을 하곤 했다. 그렇기에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자제해 온 대가로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대회 때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해 준 것에 대해 어떠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북한의 핵실험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중국이 북한의 요구에 곤란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에 대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가 틀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핵실험을 실행할 수도 있다.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에 핵실험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실 북한의 핵능력은 억제력 발휘 측면에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는 것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맞춤형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동호: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이 가열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 지속되고 있는데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작금의 국제정세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경제제재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전성훈: 세간에서 말하는 신냉전의 관점으로 풀어가 보자면, 2017년부터 이미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냉전은 이념 대립이었지만 지금은 자유 대 독재의 체제 대결이고, 이는 북한 핵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제재하고 비판하는 데에 있어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에 북한의 핵실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외교적 겉치레로 북한을 비판하고 제재에 동참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북한의 숨통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왜?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므로 북한이 핵을 통해 미국의 시간적, 심적, 물적 자원을 소모하도록 압박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된다. 과거 냉전 시대는 1945~89년까지 45년 동안 지속되었다. 대략 탈냉전 시대를 1990대부터 2017년까지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시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한 세대까지 간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약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현 정세가 유지될 것 같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을 통해 본다면 7차 핵실험과 유엔안보리 제재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에서는 단합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시행할 경우 한미일이 연합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한미일이 연합하여 북한에 대해 제재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할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상현: 아마 미국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발의하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틀림없이 부결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깨고 핵확산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에 부담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본다. 분명 채택되지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조동호: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천명국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린다.

천명국: 2017년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서 '유류 트리거' 조항을 비롯한 많은 것들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도발 시 50만배럴로 제한되어 있는 대북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과 연간 400만배럴로 제한되어 있는 대북 원유 공급량 상한선에 대해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이 있다. 물론 비토권을 가진 5개국을 포함하여 안보리 회원국들이 모여서 유류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이는 데 합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또는 핵실험 도발을 할 경우 안보리 회원국들은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보이콧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반대하였으며 다수의 안보리 회원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입장에 반하여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지난 10월의 논의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재는 해상 차단 조치 강화이다. 이는 지난번 결의안 2397호에서도 상당히 논의됐었는데 실질적인 차단활동 자체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추가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인 해상 차단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상 봉쇄 수준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북한은 서해, 동중국해 지역에서 불법 환적을 비롯한 밀거래, 밀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차단 및 봉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미국 주도로 PSI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정부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많이 약화됐고 우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참여도가 낮았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내외적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 PSI 활동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동호: 북한의 핵실험 이슈를 논할 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상현: 미국은 충분히 2차 제재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중간 전방위적인 전략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스스로 전선을 늘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추정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 중 '무핵'은 분명히 핵실험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의 미국과 중국 각각에 대한 레버리지를 고려해서 적당히 핵실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켜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의 외교관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은 중국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이 중국을 불신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중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레버리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천명국: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지만, 대만문제와 결부되는 등 특정 상황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월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후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은 뒤이어 핵실험을 강행하곤 했는데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하거나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성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P5 모두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통 이익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신냉전 구도에서 지정학적 전략의 이익이 개입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실험을 환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묵인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는 토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미국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청한다.

이상현: 미국은 대화를 시도하면서 제재 역시 가할 것 같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이행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를 비롯한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으며 동맹국들은 미국에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EU에서는 IRA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기까지 했다. 저는 IRA로 인해 2차 제재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이 협업을 할 경우,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러한 나라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2차 제재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까지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천명국: 제재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상의 북한의 해적활동 방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한미간에 이런 노력들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측면들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겠으나 국제적인 단합을 과시하는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동호: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의 효과는 이미 2017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약 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이기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경제난으로

시작된 어떤 사회적 불안정 혹은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북한 내 민심 이반, 사상 이완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북한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는 사상적 필요성에 따른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발을 자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특히 최근 NLL 침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전성훈: NLL 침범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영공과 영토, 영해가 성역이 아니며, 언제든지 미사일로 타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와 호전성을 명료하게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선 북한의 도발이 전쟁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 한 마디로 우리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건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면서 전략자산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에 대한 도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이어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아직까지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LL 침범의 경우 동해안 NLL 침범은 정전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해에서 북한이 NLL을 침범할 경우 정전 체제 무력화에 대한 첫 단계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해에서는 NLL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최근 북한이 동해안 지역에 도발한 것은 NLL과 정전 체제에 대한 무력화를 노렸다기보다 동해안 쪽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의 영해도 성역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한 번 찔러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며칠 전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군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총참모부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좌표를 비롯한 공식 일별 작전 상황을 모두 공개했기에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상현: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를 지정학적 배경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심이 몰려 있는 시기다. 그렇기에 북한이 이 시기를 백분 활용해 미사일 성능 검증과 같은, 자신들이 미뤄 온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천명국: 보통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도발을 감행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며칠 전 북한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자신들의 대응 의지와 군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고 인민군들에게 단호한 보복 의지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획된 목적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표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굉장한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과거부터 비난과 맞대응 성격의 군사 훈련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도발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먼저, 도발의 규모이다. 현재 북한의 도발은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이다. 전성훈 박사님께선 맞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는 맞대응의 수준을 넘어선,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으며, 그 외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총 13발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지대공 미사일 23발을 발사했다. 또 전략 순항미사일을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까지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장거리 방사포탄 46발, 포병 사격 160여 발을 발사하면서 약 500여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했다. 우리나라 항적상으로는 180여 대라고 확인되긴 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도발이 전례 없는 규모라는 것이다. 북한은 비용과 유류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다음으로 도발의 수준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NLL 이남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사격하여 속초 동쪽 57km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렸으며 울산 동쪽 80km 지점에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은 고도를 낮춰 비행하는 미사일이기에 그만큼 속도도 느리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일반 비행 항적과는 달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또한 솟구치면서 불꽃이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해 군사위성(적외선 탐지용)으로 쉽게 포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속도도 탄도미사일에 비해 빠르지 않기에 항적, 속도, 고도 면에서 일반 비행기와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순항미사일 탐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한 남북군사합의서상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구역에 약 160여 발의 포탄을 사격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하진 않았으나 이는 남북군사합의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가 먼저 합의서를 폐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특수기능전투부로 지칭한 EMP탄이 있다. 북한은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신뢰성 검증을 위해 탄도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탄착점이 확인되지 않고 일본 상공을 지나 공중에서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라고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실패가 아닐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핵무력 정책 법령 마련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까 싶다.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북한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NLL 이남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자신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이러한 도발을 할 때 과연 한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탐지 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응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볼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울산 앞바다 가까이 떨어뜨린 것은 한미 동맹을 비롯한 3축체계의 공백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종심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군사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능력 불신을 조장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대규모의 기계화 부대 기동 훈련 없이 탄도미사일만 발사하고 있고, 화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탱크를 기동하려면 유류가 필요한데 유류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스커드 계열과 같은 오래된 미사일을 발사해 소모시키는 것은 미사일의 수명을 고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KN23, 24와 같은 최신형 탄도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것으로 보아 이런 부분에 우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동호: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전성훈: 핵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하나 제기하자면, 핵과 관련된 담론들이

재래식 시대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정세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섰고, 특히 한반도는 핵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껏 핵무장, 전술핵 확장, 핵 억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앞선 언급처럼 이러한 찬반 의견들은 재래식 시대의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핵시대다. 상대방의 핵무기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와 시각에서 과거에 논의했던 확장 억지와 관련된 전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간과해 왔던 문제점을 고치고 재래식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에 대한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확장 억지의 상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B1, B2, B52 전폭기 등의 전략자산이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략자산인 ICBM은 미국 본토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자산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의견들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CBM을 예로 들어 보겠다.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쏘면 미국은 본토에서 ICBM을 발사할 것이다. 그러나 ICBM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 미주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략 시카고에서 서울로 가는 궤적인데, 사실상 미사일의 목적지가 평양, 북경, 서울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이기에 상대적으로 미사일 폭격의 위험이 덜하겠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ICBM이 본인들에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 체제는 비상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만일에 발생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그들을 향한 미사일이 아님을 통보할 것이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이후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때, 미국의 핵 억지가 정말로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전략자산을 꼬집어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전략자산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에 관련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대략 4~5개 정도 되는데 저는 이를 '유사 핵공유'라고 지칭한다. 진짜가 아니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

이상현: 북핵과 관련하여 남북 모두 핵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 북한이 가진 신화는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 미국이 자기를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아마 미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다음 한국의 신화는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이다. 이 두 가지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앞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이미 다 언급됐다. 자체 핵개발도 있고 전술핵 재배치도 있고 심지어는 핵공유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다. 우리 자체의 대응 측면에서는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확장억제다. 우리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SCM에선 처음 사용된 표현인데,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공격을 할 경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확장억제 수단 운영을 연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나름대로 확장억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본다. 북한이 여기에 기가 죽을지 아닐지는 우리의 영향력 밖이고, 우리 입장에선 한미 확장억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SCM을 통해 얻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다. 물론 아까 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축 체계도 그렇고, 일단 미사일이든 핵이든 100% 막아 낼 완벽한 방어수단은 없다. 그래서 L-SAM, M-SAM, 사드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서 다층의 방어망을 만들어 방어 기회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동호: 전술핵 재배치든 3축 체계든 확장억제의 강화든 간에 이것들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못하도록 막는 수단으로 보이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결국 북한이 담대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정말 극단적인 수준의 제재,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계속 갖고 있으면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느끼는 정도의 제재를 시행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려운데, 지금 국제 여건상 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천명국: 앞서 전성훈 박사님께서 일부 언급해 주셨지만, 현재의 북핵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전략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를 북한의 비핵화에서 핵위협 억제 및 핵위협의 안정적 관리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남북 전략균형의 회복이다. 자체 핵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이런 걸 통해서 남북 전략균형을 회복한 후 다음 단계로 남북 핵 군비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잘 될 경우, 세 번째 단계로 동북아 핵 군비통제체제 구축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나 비핵화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 전략균형 회복을 위해 자체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핵 우위를 상쇄시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재래식 3축 체계를 통해 적의 핵위협에 맞서는 시도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작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제반 수단들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수단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할 것으로 믿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는 억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억제가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때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옵션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킬 체인으로 북한 미사일을 타격하고, KAMD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며 KMPR로 북한 지도부가 숨어 있다고 생각되는 지하시설을 타격하는데에는 이런 대응수단들이 유용할 수 있으나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내재된 취약성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확장억제의 취약한 고리를 공략하고자 미국 본토 공격 능력, MD 돌파 및 기습 능력 등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확장억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이슈는 남북 전략균형 회복을 통해서 억제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전략균형 회복 노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핵 군비통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핵탄두라든가 핵물질 투발 수단, 인프라 같은 것들을 남북 모두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핵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핵전쟁 위험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남북이 안정적으로 공존해야 된다. 남북 핵 군비통제체제 구축과정에서 검증체제를 마련하여 상호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핵 군비통제체제 구축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 간 신뢰가 구축되고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추진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남북 전략균형 회복 조치로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체핵보유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이다. 물론 이 과정에에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문제, NPT, 양자 원자력 협정 등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측면에서 도전 요인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핵물질 확보, 특히 우라늄 연료의 확보, 핵물질 재처리 및 농축 기술 확보, 기폭장치 설계, 기폭장치의 핵탄두화, 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략균형을 위한 옵션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극복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적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파이브 아이즈에 버금가는 일류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미동맹은 아직까진 파이브 아이즈처럼 신뢰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간 단계로 미일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하여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의 융통성,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영국, 호주와 같은 미국의 일류 동맹이 되어 제반 자율성, 특히 전략균형 회복 조치에 필요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경제 블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경제블록 둘로 나눠지고 블록 간 높은 장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조동호: 북핵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방향성, 특히 장기적인 대응 전략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등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통일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인 '사통팔달'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통일부, 기재부, 외교부 등 우리 정부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전성훈: 통일부 자료를 보면 '사통팔달'이란 고사성어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루트가 막혀 있다. 사통팔달은 커녕 뚫린 곳이 하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핵시대이기 때문에 통일정책 역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정하고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협력할 수는 없다. 북한에 핵이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교류·협력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떠나 남북간 대화는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비판할 의도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모두들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모두 담대한 구상 자체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 여부이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것이 바로 그 의문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북한에 핵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북·통일 정책을 구상하여 핵은 핵대로 관리해 나가고, 이와 별개로 남북관계와 북한 동포들에 초점을 둔 대북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상현: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가 북한에 핵이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교류·협력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반론 역시 언급해 주셨다. 이 점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말한 'nuclear weapon states', 즉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NPT가 정의하는 핵무기 보유 국가는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떤 학자들은 'nuclear armed state'라고 명명하고 있다.

전성훈: 그렇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명칭을 떠나 북한은 현재 핵을 명백하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이어서 외교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외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삼축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며 전략자산을 도입시켜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은 더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즉, 현재 정부의 억지력 강화 정책과 외교를 통해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정책이 상충되도록 하는 서로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한에 핵이 없었을 적에는 군사적으로 팀스피리트(Team Spirit) 같은 훈련을 통해 압박하고 이를 통해 핵개발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으나, 현재의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북한의 핵보유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교를 통해 경제와 안보 부분의 지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단순한 실천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여야 간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접점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졌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어받으면서 한민족에서 "한" 자 떼고 민족통일 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진보, 보수가 합의한 통일방안이다.

천명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외교부는 긴 호흡을 갖고 비핵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한편, 국방부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현실로 닥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당장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

조동호: 이상현 박사님께서 혼동될 수 있지만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다. 전성훈 박사님께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 간 상충되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천명국 박사님은 부처별 역할 수행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상현: 이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북한을 끌어들여서 대화의 문이라도 열어야 하는데, 현재 그럴 만한 여지가 없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단칼에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마땅히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앞서 천명국 박사님께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핵화가 아닌 핵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도 지금까지 억제, 방어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는데, 위기 관리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위기 관리를 위해서 통일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위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끌어들여야 하기에 NGO를 통하든 유럽 국가들을 통하든 어떤 접촉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비핵화가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졌는데 왜 우리가 자꾸 비핵화 언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려해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언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선언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파기했는데 우리는 왜 고수하는가?'의 문제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공동선언을 깼어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공동선언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통일부가 배경과 논리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의 정책은 될 수 없지만 선언적 정책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훈: 우리의 미래 비전이 현실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정부의 미래 비전은 천명국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각종 대북 폐쇄, 군사적 폐쇄 정비와는 맞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인 딜레마이다. 그리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론 북한이 거부하겠지만 국제기구나 제3국을 우회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을 통일부가 허가했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우리 정부가 관여되면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몇 걸음 더 뒤로 물러나 있고, 국제적인 NGO 또는 우리나라의 NGO를 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선심 쓰듯이 해서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게 작업해야 할 것이다.

조동호: 북한이 받겠다고만 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크게 줄 의사는 당연히 있겠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절대 우리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오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금번 협의회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혹은 뾰족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재차 절감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상황이 마치 안개 속 같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바쁘신 가운데 협의회에 참석하여 유익한 의견을 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이번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다.